

보도자료

2025. 3. 24.



양형위원회

문의

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02-3480-1924)

양형위원회 3/24(월) 제137차 회의 결과

-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5. 3. 24.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어,
①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②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③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④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여 확정하였음
 - 지난 제136차 회의(2025. 1. 13.)에서 의결된 각 양형기준안(원안)에 대하여 2025. 2. 17.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위원회에 그간 접수된 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심의하여 이번 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한 것임
-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새로운 양형기준은 관보의 게재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5.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됨*
[*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음(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 확정된 각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종전 원안 중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 의결(특별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안과 동일함

①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원안대로 의결

1. 원안의 주요 내용: 사기범죄 형량 상향,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강화

■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중피해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일반사기 및 조직적 사기의 각 소유형 3(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과 소유형 4(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소유형 5(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기본 및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함
- 이에 따라 일반사기 소유형 5 및 조직적 사기 소유형 4의 가중영역 상한이 17년으로 상향되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적 사기 중 소유형 5의 가중영역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권고함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함. 형량범위를 특별조정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권고적 효력을 가진 양형기준의 적용원칙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따르게 됨]

○ 형량범위 정리

0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9년	6년 - 9년 11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11년	8년 - 13년 17년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11년	8년 - 11년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5년	11년 이상, 무기

■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강화

☞ 전체 양형인자표 등은 ‘[별첨1]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중 해당 부분 참조

-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함
-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하고,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추가함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삭제함
-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

-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함
- 조직적 사기의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를 추가함
-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함
 -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제한함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②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원안대로 의결

1. 원안의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형량 상향,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정비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법정형의 상향(3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이에 따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유형 2)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함

○ 형량범위 정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6월 - 8월	4월 - 10월 1년	6월 - 1년2월 8월 - 2년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8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 - 4년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정비

☞ 전체 양형인자표 등은 '[별첨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중 해당 부분 참조

-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범위를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으로 제한함으로써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의 적용범위를 축소함
-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추가함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③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수정 의결

1. 원안의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벌금형 포함) 신설

■ 설정대상 범죄

-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제10조 제2항), 제3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각 행위의 상습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위 각 형의 1/2까지 가중]

■ 권고 형량범위

-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법정형, 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벌금형 포함)
- 각 유형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됨
- 형량범위 정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3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2,000만 원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월, - 500만 원	2월 - 10월, 100만 원 - 1,000만 원	4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전체 양형인자표 등은 ‘[별첨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중 해당 부분 참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
- 범죄의 보호법익, 형사정책적 요청 등을 고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상당한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설정하고,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 ‘중한 상해(2유형)’를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

2. 수정 의결 사항

■ 특별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의규정에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을 추가함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타인 소유 외의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을 유도하기 위해 원안의 ‘실질적 피해 회복’ 정의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공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동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소유이거나 무주(無主)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켰다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④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원안대로 의결

1. 원안의 주요 내용: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공탁 관련 양형인자 등 정비

▣ 설정대상 범죄

- ① 공중밀집장소 추행, ②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③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를 새로이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성폭력 처벌법	§ 11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3년 ↓, 3,000만↓
	§ 10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3년 ↓, 1,500만↓
형법	§ 303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7년 ↓, 3,000만↓

▣ 권고 형량범위

- 2018. 10. 16.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시행으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법정형이 상향(2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되었고, 2020. 5. 19. 같은 법의 개정·시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법정형도 상향(1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됨
-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 형량범위 정리

※ 이하 삭제는 붉은 글씨, 수정은 파란 글씨로 표시함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 중유형 나.에 소유형 1로 추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중밀집장소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12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3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3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6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성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 중유형 다.에 소유형 1, 2로 추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 10월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3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4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5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6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양형인자

☞ 전체 양형인자표 등은 ‘[별첨4]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중 해당 부분 참조

-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대유형 1, 중유형 나)의 양형인자표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의 경우 피해자의 특성, 구성요건 및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대유형 1, 중유형 다)의 양형인자표를 각각 공유함
-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윤간’, ‘임신’을 특별가중인자로,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을 일반가중인자로 각 설정함

■ 성범죄군 전체의 공탁 관련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비

- 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

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함

2. 의결 결과: 원안 유지

※ 의결된 **[별첨1]**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별첨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별첨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별첨4]**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